'법 허점' 광주 해킹커닝 고교 징계 미룰수도

광주시교육청…교장 등 9명 중·경징계 요구
"지난 2018년 징계 수위 낮춰 물의 빗기도"

광주시교육청이 '교사 노트북 해킹커닝' 사건이 발생한 고교의 교장 등에게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만 요청할 수 있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허점을 노려 사립학교 법인 등이 징계위 논의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어 행·재정적 압박을 동시에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월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2명이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중간·기말고사 답안지를 빼내는 사건이 발생한 광주의 A고교와 법인 등에 지난 28일 관리·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교장 중징계(정직 1월), 교감 등 2명 경징계(감봉 2월), 교사 등 6명에 대해 경고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또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교육청 차원의 징계위를 구성해 중징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징계위를 구성한 상태에서 A고교 법인 등의 징계 결정 과정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상급기관이 학교법인 등에 징계를 요청할 경우 "며칠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방법으로 사립학교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행·재정적인 압박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A고교는 지난 2018년에도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짜고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은 퇴학·학부모와 행정실장은 구속됐으며 시교육청은 교장·교감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학교법인 등은 시교육청의 요청에도 불구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췄으며 당시 교감이 현재 교장으로 승진했다.

광주의 교육단체는 "징계 대상 교원이 정년을 앞두고 있을 경우 법인 등이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퇴임 했다는 이유로 남아있는 교원만 징계를 하거나 낮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법인 등이 징계를 제 때 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연수 제한을 비롯해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는 등의 재정적 압박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관리·보안 부실을 확인했고 학교측도 인정했기 때문에 징계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징계를 늦출 경우를 대비해 학교에 대한 압박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경찰 "위험 예견 어려웠다"…CCTV 영상 51개 확보·분석

주최측 없을 시 메뉴얼 없어…"이번에 마련"

이태원 핼로윈 압사 사고로 154명이 숨진 가운데 당시 현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렸음에도 경찰은 주최측이 없어 별도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위험을 제대로 예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회나 인력 배치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월 31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주최측이 없는 다중 인파 사건에 대응하는 경찰의 관련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주최측이 분명한 행사의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의료 유관기관들이 사전에 역할을 나눠 대응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최자가 없고 다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 사례에 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그와 관련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 당일에는 불법 단속 및 범죄 예방과 교통 소통관리를 위해 경력 137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부터 이전까지 대부분 30명에서 90명 수준으로 경찰이 대처해왔다"고 강조했다. 경비인력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운집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통상적 위험을 예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도 방역 완화 후 열렸지만 특정시간대 특정장소에 집중적으로 인파가 몰린 반면, 이태원 핼러윈의 경우 여러날에 걸쳐 주변 일대에 모이기에 두 경우를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정도, 또 조금 넘는 인원이 모였지만 집결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모였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장에 직접 지휘를 나간 간부도 '현장에 사람이 많았지만 급작스런 인파의 급증은 느끼지 못했다'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나간 분들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 판단을 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현장 판단의 아쉬움은 우리가 갖고 있다" 면서도 "그때 경찰관이 좀 더 많았다고 해서 완전한 통제가 됐을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전략이나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새로 매뉴얼을 만들 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력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입장과 궤를 같이한 셈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당시 경력 배치가 적절했냐는 질문에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력 등의 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단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다만 이 장관이 당시 광화문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린 시위 대응으로 경력이 분산됐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그날 주간에 있었던 집회들은 오후 9시 이전에 대부분 종료됐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10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기에 시간적인 진행 순서가 있어서 꼭 (경력 분산) 그것보다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관과 경찰 내부에 일부 견해차가 있다는 의미냐'고 기자들이 묻자, 이 관계자는 "그런 건 아니다. 이 장관도 직접적으로 '(집회가) 관련이 있다'고 말한 건 아니다. 보완적으로 그때 시간대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이태원 상인회가 경찰과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에 사전 통제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회의 때 안전에 대한 구체적 부분이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수사팀은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과학수사팀, 피해자보호팀, 전담수사팀 등으로 구성된 47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바 있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사고 현장 인근 공공 폐쇄회로(CC)TV 외에 사설 CCTV까지 42개소에서 51개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물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또한 목격자와 부상자, 사고현장 인근 업소 종업원 등 44명을 상대로 조사했고,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후 2시부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합동 감식도 실시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마약류 관련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까지 마약과 (사고의) 관련성은 확인된 바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일부 목격자들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일부 인원이 "밀어" 등의 말을 하며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선 과실치사상죄 적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 본부장은 "사고의 수습과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청 수사본부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이슬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조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월 31일 오전 전남도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건물 화장실에 낙서한 60대 경찰에 자수

개인 소유 건물 화장실 벽면에 '구청장 사퇴' 등 문구를 마구잡이로 쓴 60대가 형사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월 31일 건물 화장실 벽면에 유성매직으로 낙서를 한 혐의(재물손괴)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월 30일 오전 10시 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 빨간 유성 매직으로 '풍암저수지 매립 반대', '서구청장 사퇴' 등 낙서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없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청사 주변 안내판·버스정류장에서도 '풍암저수지 매립 반대', '서구청장 사퇴하라' 등 문구가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산구선관위, 하남농협 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지난 10월 27일 하남농협 조합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임형택 기자

해양경찰교육원, 줄 있는 교육시설 견학·체험 방문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각종 기관·단체·학교 등의 교육시설 방문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완도해경, 유관기관 합동 해안방제 훈련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10월 27일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안가에 기름이 달라붙은 상황을 가상하여 해안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주 남부소방,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위한 '소방전술훈련' 평가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여수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민간인 표창장 수여

여수경찰서는 손님의 통화내역을 듣고 이상함을 감지, 신속한 대처로 지역주민의 소중한 재산과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무안경찰, 배달업체 협업, 스토킹 범죄 예방 홍보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맞춰 무안전지역을 관할하는 배달업체 및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업하여 스토킹 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무안=이기성 기자